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생활, 산업, 문화를 아우른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필요성

국제화에 따른 경제 개방,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건축·도시 부문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공간환경 및 건축에 대해 최소 품질 확보가 아닌 품격과 가치 제고를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국가경쟁력 지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핀란드 등 유럽 13개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호주 등에서도 건축정책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건축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최초의 국가 계획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건축정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건축과 관련된 산업·경관·환경·에너지·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이다. 장기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전략계획이며, 과

제의 종합검토와 효율적 이행을 위해 복수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계획이기도 하다. 특히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건축 관련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이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60개 건축 관련 학회·협회·단체 소속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70여 차례의 민간 합동 회의를 통해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계획(안) 확정 후에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국가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안)의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원안대로 가결(2015.5.22.)하였으며, 제8차 무투회의를 거쳐 공공건축물의 계획적 리뉴얼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2015.7.9). 마지막으로 대통령 보고를 거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공고되었다(2016.11.2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최근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건축·도시 부문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국내 고령화율은 2014년 12.7%에서 2050년 37.4%로 급증하여 향후 노인 복지시설 확대와 시설 개선 수요가 증가하며, 출산율 감소로 부동산신축 수요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2020년께에는 50%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건축시장에서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비중이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범지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어젠다가 수립되었으며, 국내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등 온실가스 증대와 기후 변화를 고려한 국가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주택에 대한 인식의 가치 변화, 가족형태 다양화, 맞벌이 가구 비중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증가에 따라 건축 수요가 다양화될 것이다.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레저시설, 한옥 등 수요와 건축물 디자인의 가치도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실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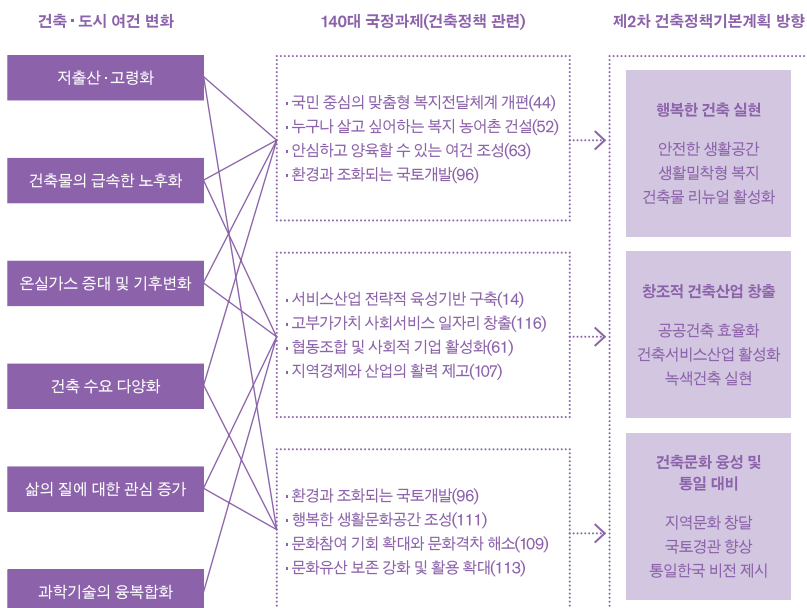
개선 요구, 주거활용 여가활동 및 세컨드 하우스 수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ICT 기반 첨단기술의 발달과 신소재 기술 융합 발전 등으로 건축물 기능이 확대되고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건축물의 급속한 노후화, 온실가스 증대 및 기후 변화, 건축 수요의 다양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 기술의 융복합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계획은 앞서 살펴본 건축·도시 여건 및 정책수요의 변화와 제1차 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건축물 안전, 투자활성화 등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책수요의 변화와 함께 140대 국정과제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건 변화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는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및 통일 대비’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계획의 방향을 크게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의 세 가지로 수립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방향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목표로 하여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목표와 그에 따른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실천과제

비전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목표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추진 전략	■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 공공건축 효율화	■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실천 과제	1-1-1.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 1-1-2.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1-1-3. 건축안전 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2-1-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2-1-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2-1-3.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체계적 추진	3-1-1.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3-1-2.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3-1-3.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
추진 전략	■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 국토경관 향상
실천 과제	1-2-1.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1-2-2.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공간 조성 확대 1-2-3.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 복지시설 통합 연계	2-2-1. 건축서비스업무 발주제도 개선 2-2-2.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2-2-3. 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3-2-1.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3-2-2. 경관형성·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추진 전략	■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 녹색건축 실현	■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실천 과제	1-3-1.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1-3-2. 도시 내 기존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1-3-3.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2-3-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2-3-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2-3-3. 녹색건축 산업 육성 2-3-4. 녹색건축 저변 확대	3-3-1.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3-3-2.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2015.12., p.12.

행복한 건축 실현

추진전략 1인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건축물 실내안전, 생활안전 증진사업 등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과 지역건

축안전센터 설립,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시공기록 보관 및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소규모 건축물 안전 등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추진전략 2인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은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충, 학교시설의 정기점검 및 복합 활용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장애 설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계획 수립 및 공공주택과 복지시설의 복합화 내용을 포함하였다.

추진전략 3인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에서는 지역 건축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 참여,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지역업체 역량 강화,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현황관리 체계 구축, 활용모델 개발 등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추진전략 1인 ‘공공건축 효율화’에서는 사전기획 업무 강화, 성과관리체계 및 총괄조정체계 구축 등 공공건축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담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의 성능과 주변 여건 등의 리뉴얼 진단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리뉴얼 이행 지원 추진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2인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는 기술력과 창의력 중점의 설계자 선정,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정한 설계보상비 책정, 건축 엔지니어링 계약체계 개선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축사 업무범위의 다양화, 건축 엔지니어링 책임 강화 등 민간 건축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 실무 중심의 교육 자격제도 개선, 마을 단위의 산업 육성과 ‘글로벌 표준’ 제정, 개발도상국의 건축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전략 3인 ‘녹색건축 실현’에서는 패시브 주택 의무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 시행 등 국민체감형 기준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등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선진

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관련 부처간 협업 및 정보체계 강화, 홍보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였다.

건축문화육성 및 통일대비

추진전략 1인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에서는 건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과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건축문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관광산업 육성,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등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가치 발굴과 보존·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2인 ‘국토경관 향상’에서는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 국가상징 경관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공감을 형성하고, 관리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행정기반 구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진전략 3인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에서는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한 건축자산 실태조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협력 등의 공동 연구, DMZ와 미래도시의 공동 개발 추진계획으로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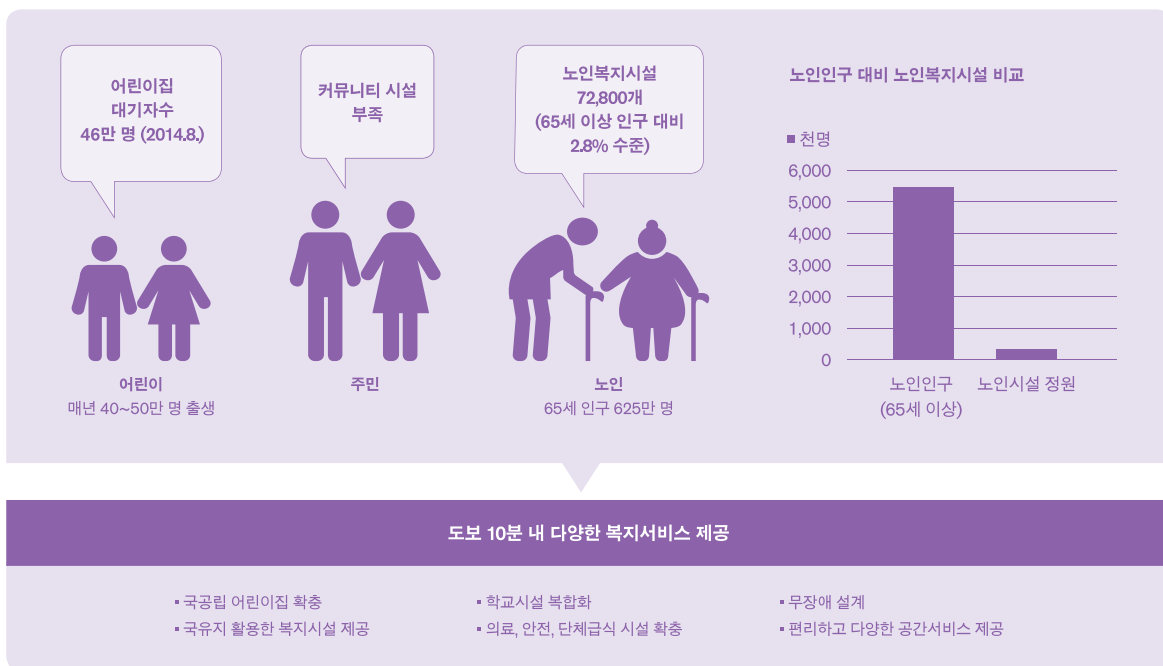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의한 기대 효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노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 증가와 생활안전사고, 지하주차장 및 공원 등의 범죄발생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기초조사 및 제도 개선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2017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보 10분 내에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건축정책은 포용하는 정책 범위가 넓어 정량적으로 기대 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 삶의 질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유휴공간과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등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공간에 대해서는 리뉴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건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을 통한 연간 2조 2,000억 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성과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최대 1조 4,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사업체당 생산성은 OECD 평균인 연간 369만 달러보다 낮은 232만 달러에 그치는 등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발주제도와 민간시장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에너지의 녹색건축 성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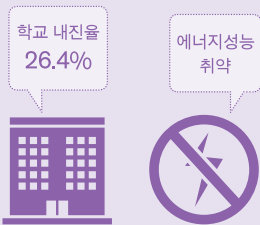
공공건축 효율화

공공건축물 노후도 증가

- 준공 후 30년 이상 공공건축물
21,000동(2015년) → 46,000동(2025년)
- 리뉴얼계획은 468동에 불과



건축물 성능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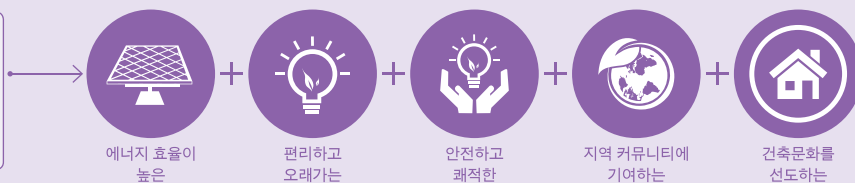
낮은 건축물 디자인 경쟁력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
- 접근성 부족
- 노인 및 장애인 고려 부족



좋은 공공건축, 연간 최대 1조 4천 억 예산절감 효과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지역 공공건축가 육성
- 기준 및 매뉴얼 개발
-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 개선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창의적 디자인
창출이 어려운
설계단가



가격 위주의
발주제도

2,32백 만 달러/1년(우리나라)
3,69백 만 달러/1년(OECD 평균)
*반스 리포트(영)

단위사업체당
생산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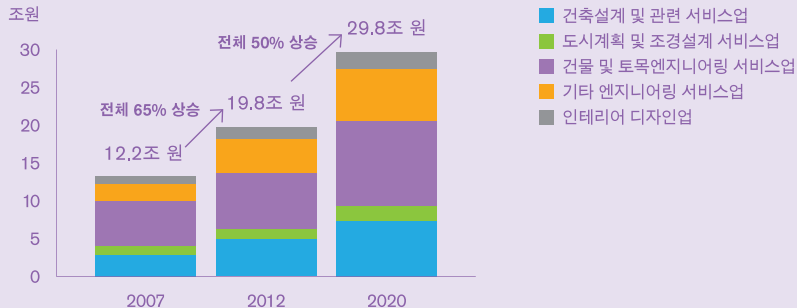
국가경쟁력
부족

ENR지 '세계 150대 설계사'에
우리나라 업체는 1개
* '세계 250대 건설사'에 우리나라 업체는 12개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 발주제도 개선
- 민간시장 거래환경 개선
- 창조적 인력양성
- 국제 경쟁력 강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건축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건축자산의 관리체계를 보완한 건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한옥 건축 확산을 위한 한옥문화 브랜드화, 건축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함께 한국의 건축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국토경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경관에 대해 아름답다고 답변한 국민이 60%였던 것에 반해 도시경관은 아름답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경관사업에의 주민 참여 활성화, 경관 자원 발굴,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역량강화 및 행정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와도 높은 연관성을 지닌 경관의 품격을 제고한다. 또한 2014년 3월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3원칙을 토대로 북한건축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미래의 통일한국 건축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생활공간, 녹색성장, 건축문화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환경디자인과 건축 도시환경의 수준 향상, 녹색 건축·도시 구현과 건축·도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고유 건축문화의 중요성 제고와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의 토대가 되었다. 이제는 세계 건축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양한 관계 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생활·산업·문화를 아우르는 건축·도시공간이 구현되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국토해양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22.
- 3 국토교통부(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12.
- 4 국토교통부(2016), 「건축정책 국회보고서(2010-2015)」.